

월요광장

통일과 청산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정권 유지에 있다.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3대에 걸쳐 김일성 일가에 세습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아닌 봉건전제국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은 나이 어린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국내외에서 공인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과거 핵실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이다. 우선 월급인 중국부터 북한의 외교적 의전순위를 강등할 정도로 냉담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보다 강경한 화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그들이 열망하는 핵무기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핵무기 보유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는 인류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장소이동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반국가범죄자로 다스려 공개 처형 등과 같은 반인륜적 형벌을 부과한다.

거의 불법행위를 평화적으로 청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과거청산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묵인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면하는 방법이다. 셋째 숙청하는 방법이다. 넷째 재판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은 넷째의 재판의 방법이다. 그 이유는 재판에 의한 과거청산만이 주체와 대상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기준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